

## 추미애 법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 만남·조국 사건 재판부 사찰” ... 징계 청구도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다수 확인” ... 윤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



추미애 법무



윤석열 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지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 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여러 건의 검찰 지시로 윤 총장을 압박해 온 추 장관이 끝내 직무배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검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검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검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5가지 혐의를 들었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서울 시내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부적절

하게 만나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2월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널A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을 방해한 것도 주요 혐의라고 전했다.

대검 검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개시 보고를 하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을 중단하게 하고,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 검찰부가 검찰에 나서자 윤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해 총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윤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대검 검찰부의 검찰 개시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으며 정보 유출 혐의도 적용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이후 대권 후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데도 이를 묵인·방조해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검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검찰을 방해한 것도 직무배제 혐의에 추가했다.

한편,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전두환 형사재판 결심선고와 관련해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24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소화자매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희중 대주교가 입장문 발표에 앞서 그동안의 소회 등을 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5·18 헬기사격 ‘전두환 재판’ 생중계하라”

30일 광주지법 선고 공판 ... 5월 그날의 진실 전 국민이 알아야  
5월단체·시민사회단체·지역 국회의원 “재판 생중계” 한목소리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여부는 진상 규명의 핵심 사안이다.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받는 전두환씨는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다. 오는 30일 열리는 재판이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것도 헬기 사격 진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자리라는 점에서다.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바뀌고 국가기밀일이 됐지만 왜곡·폄훼하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헬기 사격의 진상과 전세 거짓말 여부에 대한 진실을 생중계해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다. 5월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비롯해 더 이상의 왜곡과 폄훼를 끊어버리는 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씨의 선고 재판을 앞두고 ‘그날의 진실’을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월 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재판 생중계의 필요성을 부르고 있다.

송갑석(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과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전씨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전씨 재판 생중계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계기라는 점에서 생중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송갑석 광주시장 위원장은 “무고한 시민들을 총칼로 학살한, 시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전두환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이라며 “역사의 현장을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했다.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사의 기록으로도 남겨야 한다는 게 송 위원장의 지적이다.

이형석 의원은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핵심 과제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역사의 장”이라며 생중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민주화운동의 상징인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 진상 규명 사안 중 하나인 헬기 사격에 대한 진실을 전 국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5·18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 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5·18 역사왜곡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생중계 전례가 없더라도 재판부는 한국 민주주의와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점에서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오섭 의원은 5·18에 대한 왜곡이 끊이지 않는 데다, 폄훼하는 세력들도 여전히 상황에서 전 국민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게 국민과 공감해야 할 사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5·18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더 이상의 폄훼를 막는 것도

사법부가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5·18 역사왜곡저항 광주운동본부’도 25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5월 단체와 5·18 기념재단 등은 이미 유선상으로 재판부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다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들어 거절당한 바 있지만 재차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박근혜씨에 대한 탄핵 재판시 재판 내용 전부가 언론에 공개된 적은 있지만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홍성철 진보연대 집행위원장도 “전씨의 재판은 전 국민적 관심사”라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관심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교감하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며 생중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사무국장은 “진실이 밝혀지는 현장을 전국민이 보게 되면 왜곡·폄훼 세력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기자협회·사진기자협회·영상기자협회도 25일 재판 생중계와 현장 촬영을 요구하는 입장을 광주지법, 법원행정처 등에 보내기로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김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 코로나19 거침없는 확산세

광주교도소 1994명 전수 검사

광주교도소에서 잇따라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자 방역당국이 수형자와 직원 등 교도소 관련자 1994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착수했다. 전남지역 확진자는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영광의 원불교 관련 대학교, 순천의 건설현장 식당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집단감염 우려도 여전히다. <관련기사 2면>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에서는 4명, 전남에서는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에서는 이날 광주 교도소 수용자 2명이 각각 광주 619, 620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전날 확진된 618번과 같은 거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주 교도소 관련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광주에선 또 이날 남구 호프집 관련 1명과 상무지구 룬소주방 관련

1명 등이 추가됐다.

전남에서는 이날 순천시에서 2명, 나주시에서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순천지역 확진자는 조례동 모 아파트 건설현장 근로자 2명이다. 발열 증세를 느낀 40대 근로자(전남 360번)가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후속조치로 건설현장 식당(일명 합바집) 이용자 등 24명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확진자 2명이 이날 확인됐다. 나주 확진자는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23일 모두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순천시 3명, 영광군 3명, 여수시 1명이다. 순천시 확진자는 건설현장 근로자 1명, 풍덕동 분식집 1명, 코호트격리 중인 별랑면 상삼마을 주민 1명이다. 영광 확진자 3명은 원불교 재단이 운영하는 ‘영산선학대학교’ 관련자다. 여수 확진자는 인천 유흥주점 접촉자로 여행 중 여수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자로 분류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전**  
11.06 - 11.30  
온라인 소셜플랫폼 운영 NAVER | 영남문화재단 | 인  
주최:주관 | 후원:일보사 | 매일신문사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5TH ACC ANNIVERSARY CELEBRATION

**A I C I C**  
ASIA CULTURE CENTE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5주년**

아시아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담은 세계적 문화발전소  
세계와 소통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함께 합니다.

A I C I 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SIA CULTURE CENTER